

인권단체 질의에 대한 답변

유엔인권옹호자 선언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1.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옹호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역할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옹호자들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질의사항 관련

○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제8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단체 및 활동가와의 교류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정책 및 조사 관련 인권단체와의 수시적인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가 생산하는 각종 자료를 공개·제공하고, 옹호자 인권침해시 진정조사 및 긴급구제 처리 등을 통한 보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일정 부분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이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회는 최근에도 밀양과 제주 등 인권현장의 인권옹호자들의 활동과 관련, 인권침해 예방을 우선으로 모니터링과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펼쳐왔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긴급구제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하여 왔습니다.

예컨대 제주강정마을의 경우, 총 4회(총 8일, 연인원 59명)의 인권지킴이단 활동과 두차례의 긴급구제 요청에 대한 현장해결, 35건의 진정 중 총 7건(병합사건 제외)에 대해 인용하여 권리구제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붙임 1 참조). 위원회는 앞으로도 유엔의 ‘인권옹호자 선언’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세션에서 한 답변에 대해

2. 2010년 농성중인 장애인인권옹호자 관련

2-1. 인권활동가에 대한 물리적 사용 주장과 당시 농성을 제지하도록 지시 주장 관련부분

○ 2010. 11. 22.부터 12. 10.까지의 농성과정 중에 발생한 일체의 마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 농성초기인 11. 22. 부터 12. 2. 21:00까지 인권활동가들이 11층 배움터를 점거하는 동안에는 일반 직원들과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2. 2. 21:00경 위원회의 7층과 13층을 제외한 전 사무실로 점거농성이 확대되었고 12. 3.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들의 출입을 활동가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활동가들과 직원들간에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다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위원회 설립이후 여러차례 점거농성이 있었지만 위 농성과 같이 다수의 인원이 사무공간을 점거한 일은 없었으며 위원회는 그동안 단체들의 배움터 등에 대한 점거농성에 대해서는 퇴거요청 공문 전달을 통해 농성을 중지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2-2. 전기와 난방의 중단주장과, 점거 시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조건 제공 부분 관련

○ 우리 위원회 청사는 임대 청사로서 건물 중 일부만 임차하고, 건물 전반의 관리는 위원회와 직접 관련 없는 별도 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통상 평일 18시 이후에는 건물난방이 중단됩니다.

당시 점거농성기간 동안 활동가들로부터 11층 단전 및 난방재개 여부 확인 등에 대해 요청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관리업체 자체 판단으로 단전을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건물관리업체는 2010. 11. 22.부터 12. 10. 점거농성기간 동안 전기를 차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전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보고관의 활동가 농성과 관련한 의견에 대해 위원회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주요 인권현안으로 점거농성시 활동가들의 신체,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음식물, 의약품, 식수가 제공되도록 권고해왔고 당시 농성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은 준수되었습니다.

2-3. 전기와 난방을 중단해 장애인권활동가 건강악화 및 사망에 대한 책임 관련

○ 고 우동민 활동가가 우리 사회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한 점에 대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당시 언론기사(오마이뉴스, 2011. 1. 4)에 “고 우동민 활동가는 2010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 등을 촉구하며 인권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응급차에 실려 입원했고, 이후 병세가 호전되었으나 2010년 12월 8일 ‘2011년 예산안과 장애인활동지원법’이 통과 된다는 소식에 긴급히 열린 기자회견과 국회 앞 도로 점거투쟁에 참여했다가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 2011년 1월 2일 급성폐렴 등의 증세로 사망했다.”고 보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활동가가 우리 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도모하는 생산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인권활동가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3-1. 2013. 10. 긴급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 인권위원이 아닌 조사관이 긴급구제를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유 관련

○ 2013. 10. 4. 긴급구제 신청은 공사장 통행 제한, 음식물 반입, 천막 설치, 의료진 출입 제한이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는데, 10. 5.~6. 조사단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사장 통행제한을 제외한 사항은 해결된 가운데 통행제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법률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여 진정사건으로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 즉, 통행제한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위원회법상 긴급구제 요건인 침해의 계속성, 회복불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일반 진정사건으로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물 반입, 천막 설치, 의료진 출입 제한은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경찰관계자, 주민대표 등과 협의하여 이를 제한하지 않고 제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별도의 긴급구제 결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이에 앞서 위원회는 2013. 4. 4. 제11차 상임위원회에 긴급구제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해 별도번호 발번, 기존의 처리절차 정비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 사건 처리절차와 기준 검토 보고’를 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기초(현장)조사 과정에서 해결된 경우나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일반진정사건과 같이 처리하도록 했는데, 밀양 긴급구제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근거와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입니다.

3-2. 밀양 인권침해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 밀양이나 제주 같은 상황에 주목하라는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대한 입장 관련

○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은 2014. 3. 31. 현재 총 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통행제한과 관련한 4건의 병합사건에 대해 2014. 2. 10. 전원위원회에서 ‘밀양 송전탑 관련 경찰의 통행제한에 대한 의견표명’(위원회법 제32조, 제39조, 제25조에 따라 각하, 기각, 의견표명) 결정을 하였고, 긴급구제 2건 중 1건은 합의종결(96호 농성자 보호조치 관련), 1건은 긴급구제하지 않기로 결정(1차 고 유한숙씨 분향소 관련)하였습니다. 이외 진정사건 15건 중 1건(2차 고 유한숙씨 분향소 관련)은 현장 중재로 해결되어 진정인이 긴급구제 신청을 취하하여 종결하였고, 14건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붙임 2 참조) 그동안 통행제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의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회는 밀양과 제주 등 인권현장에 대해 인권침해 예방을 우선으로 한 모니터링과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펼쳐왔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처리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구제조치를 하여왔습니다. 위원회의 이 같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회에 부여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4. 2010년 한진중공업 김진숙씨 관련, 긴급구제에 대해 기각한 건이 없다고 거짓답변 관련

○ 김진숙씨 관련 긴급구제 신청은 2011. 6. 28. 2건, 2011. 7. 4. 1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6. 28. 접수된 긴급구제 2건에 대해 신청 당일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회사측과 경찰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회사측이 식사 · 음료 · 렌턴 · 의복 · 약품 등을 공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경찰도 회사측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할 것과 농성자 및 시위자에 대한 법집행시 최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중재에 의해 긴급구제 신청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2011. 10. 11. 해당 소위원회에서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의해 기각하였습니다.(붙임 3 참조)

○ 다만, 7. 4. 접수된 긴급구제 신청 건은 피진정인을 한진중공업으로 특정하여 위원회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국회 답변 등에서도 김진숙씨 긴급구제 건에 대해 현장해결되어 기각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2011. 9. 19. 인권위원 3명이 김진숙씨 농성과 관련하여 의견표명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지만 다수의 위원들이 위 긴급구제 신청과 같이 위원회의 중재노력으로 진정인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모두 해결됨에 따라 별도의 조치나 의견표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5. 인권위가 기능적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 인권위원의 임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2001년 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법(2012년 개정)의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의 임명과정에 인선절차의 신설과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긴급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의견표명, 성명 등의 방법을 통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논의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위원회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위원회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치적 입장이 아닌 오직 인권을 기준으로 삼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6. 진정 사건 지연 관련

6-1. 현병철 위원장 취임 전후 진정사건처리일수 비교

구 분	취임 전 (2004. 10. 1. ~ 2009. 6. 30.)			취임 후 (2009. 7. 1. ~ 2014. 3. 31.)		
	처리 건수	월간 평균 처리 건수	평균 소요 일수	처리 건수	월간 평균 처리 건수	평균 소요 일수
건 수	26,159	459	106	41,587	730	106

※ 2012년 9,587건 처리, 평균 135일 / 2013년 10,429건 처리, 평균 96일

6-2. 주요 인권침해 사건이 지연되는 이유

○ 위원회는 진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사건해결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사건이 지연처리되고 있는데 대해 진정인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원회 설립 이후 매년 진정사건이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 3년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의 조사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즉, 2009년 조직이 축소되면서 정원이 축소(21% 44명)되어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조사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표>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처리 건수

구분	접수	처리중	종결소계
2001	803		1
2002	2,790		1,856
2003	3,815		3,797
2004	5,368		5,804
2005	5,617		5,350
2006	4,187		4,206
2007	6,274		6,064
2008	6,309		6,466
2009	6,985		6,788
2010	9,168		8,398
2011	7,357	72	7,095
2012	9,582	12	9,587
2013	10,056	1,004	10,429
2014. 3.31.	2,257	1,342	2,297
합계	80,568	2,430	78,138

○ 그러나, 위원회는 조사인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진정사건 처리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인권옹호자 탄압관련 진정에 대해서는 중요사건 지정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모녀 사건에 관한 위원장 성명(2014. 3. 7)
- 국가인권위,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성명(2014. 1. 28.)
-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위원장 성명(2013. 10. 22.)
-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제한 긴급구제 결정(2013. 7. 25.) 등

7. 책임 있는 사과 관련

○ 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서면답변서는 ICC 제네바 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제출한 것이었으며 보고관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른 사항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 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향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강정마을 관련 인용사건 내역

사건번호	사건명	기관 유형	종결일자	피권고 기관	권고내용	이행 현황
11-진정 -0625000	폭언및적법절차위반에 의한인권침해	군	2012-08-16	00참모총장	강정마을 취재기자 000에게 피진정인 1의 부적절한 언행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00참모총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차원에서 피진정인1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12-진정 -0193600 12-진정 -0191500 12-진정 -0196300 12-진정 -0286700 (병합)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경찰	2012-07-30	000경찰서	강정마을 관련, 해군이 화약을 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10명의 사람들이 양손에 봉대를 감고 PVC 파이프에 팔을 서로 연결하여 반대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망치로 PVC 파이프를 깨고 그로 인하여 진정인 등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 및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 000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의 해산 및 진압과정에서 관련 시위자들에 대한 신체상의 상해 및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수용
12-진정 -0467600	경찰의 폭행	경찰	2012-11-2	000경찰서장	강정마을 시위중 경찰이 진정인을 폭행한 것과 관련,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수용
12-진정 -0467700	집회 해산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경찰	2013-05-08	00지방경찰청장 000경찰서장	경찰이 촛불시위대 해산과정에서 시위대를 사방으로 포위한 채 자진해산명령을 하고, 포위된 시위대에게 해산명령 불응 시 법령에서 규정한 것보다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고지하면서 이미 해산한 시민을 강제로 경찰 포위망에 밀어 넣은 것은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1.00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1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2.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2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소속경찰관들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상의 집회해산절차에 관한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12-진정 -0685400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 시 적법절차 위반	경찰	2013-04-09	00지방경찰청장	강정마을 반대시위와 관련,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으나 진정인 등 10명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등 경찰관의 신분확인 요구에 협조하였음에도 이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00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피진정	수용

					인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경미범죄자의 현행범체포요건 및 기준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3-진정-0261600	경찰의 사진 공개 및 댓글로 인한 인권 침해	경찰	2013-09-30	0000경찰서장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 게시한 행위가 진정인의 초상권(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11-진정-0602500 외 4건	경찰의 채증 개선방안 권고	경찰	2014-03-04	경찰청장	경찰의 채증 관련, 방법, 대상, 관리와 보관 방법 등에 대한 개선 권고(결정문 작성중)	-

<붙임 2>

긴급구제 관련 합의종결 사건과 고 유한숙씨 분향소 관련 긴급구제 않기로 함 결정과 조사중해결 사건 주요내용

□ 밀양 96호 송전탑 현장 농성자 보호조치 관련 긴급구제(합의종결)

1. 긴급구제 요청요지

밀양지역 송전탑 건설 공사와 관련, 2013. 11. 13. 오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96호 송전탑 공사를 시작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공사장 앞에서 주민 등 피해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추위와 비를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황토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생명·신체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긴급구제를 원함.

※ 당초 긴급구제 요청 중 농성자들에게 음식과 음료, 방한복 및 침낭 등 제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은 1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해결되었음.

2. 조사경과

가. 2013. 11. 15.(금)

15:00 조사관 3명 현장 출발

19:00 밀양 송전탑 96호 공사현장 방문, 피해자와 경찰 및 한전 관계자 면담조사

20:30 동화전마을 방문, 피해자 면담 조사

나. 2013. 11. 16.(토)

08:30 밀양경찰서장 면담 조사

11:00 한전 법무실 관계자 등 전화조사와 법원 결정문 등 자료 입수

11:05 상경

다. 2013. 11. 17.(일)

13:00 한전 부산경남개발처 관계자 전화조사

15:00 피해자 전화조사

17:30 피해자 전화조사

라. 2013. 11. 18.(월)

09:30 피진정기관 청문감사계장 전화조사

11:00 피진정인 의견서 접수

11:30 진정인측 이계삼 사무국장 전화조사

13:45 조사관 현장 출발

16:30 진정인측 이계삼 사무국장 면담조사
 17:30 피진정인 전화조사와 청문감사담당관 면담조사
 18:00 진정인과 진정인측 이계삼 사무국장 합의서 서명
 18:30 피진정인(청문감사담당관 대리) 합의서 서명

3. 합의내용

가. 피진정인은 황토방에 외부단체(외지인)를 제외한 동화전마을 주민 2명에 한해서 황토방 출입을 차단하지 않음.

나. 진정인이 소속된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향후 황토방 내에서 생활하며 발생하는 모든 안전상의 문제(헬기작업 및 밭과 등 공사 진행 시 안전사고, 황토방 손·망실, 화재,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처리할 것을 약속함.

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본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6조에 따라 종결함.

☐ 고 유한숙씨 분향소 관련 긴급구제 없기로 함 결정과 조사중 해결 사건 주요내용

1. 긴급구제하지 않기로 함 결정 사건 관련

가. 진정요지

밀양송전탑 관련 자살한 고 유한숙에 대한 시민 분향소 설치와 관련하여 분향소 설치에 유족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밀양시청은 분향소 설치를 제한하고 천막을 훼손하였고, 동 과정에서 주민 4명이 실시하였음. 현재 유족과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밀양시 삼문동 소재 둔치에서 임시 분향소를 설치하여 피진정인들과 대치하고 있는바, 유족인 원하는 밀양시청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함.

나. 긴급구제 신청 조사와 심의경과

- 1) 2013. 12. 9. 09:26 긴급구제 진정접수
- 2) 2013. 12. 9. 15:50 현장 기초조사(진정인, 피진정인측 면담)
- 3) 2013. 12. 9. 18:00 분향소 현장에 빠레뜨 반입 조치
- 4) 2013. 12. 10. 10:00 분향소 제3의 장소 관련 협의(1차)
- 5) 2013. 12. 10. 11:55 유족측과 면담
- 6) 2013. 12. 10. 13:00 분향소 제3의 장소 관련 협의(2차)

7) 2013. 12. 10. 16:30 협의 결렬(시청측의 검토시간 요청)

8) 2013. 12. 12. 11:00 분향소 제3의 장소 관련 협의(3차)

9) 2013. 12. 16. 11:00 분향소 제3의 장소 관련 협의(4차)

10) 2013. 12. 16. 서울시청 앞 분향소 설치 허가

#서울시청 앞 분향소 설치 허가에 따라 반대대책위 측에서는 위원회의 중재안(제3의 장소에 분향소 설치)를 거부하고, 밀양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

11) 2013. 12. 17. 밀양시청 분향소 대집행 관련 3차 계고

12) 2013. 12. 19. 상임위원회 의결

2. 조사중해결 사건 관련

가. 진정요지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는 2014. 1. 27. 15:00경 고 유한숙 분향소를 밀양시청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였음. 동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함.

가. 밀양경찰들은 대책위 측 노인 및 유가족을 폭행하였으며, 주민 한명이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여 주지 아니함.

나. 밀양경찰들은 주민들을 원 모양으로 둘러싼 후 화장실을 가는 등 이동을 제한함.

나. 조사 경과

- 2014. 1. 27. 12:00 반대대책위 밀양시청 앞으로 분향소 이전 추진, 경찰과 충돌
- 같은 날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및 직원 현장 출동, 대치중인 주민 및 경찰에 대한 조사 실시
- 경찰은 밀양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마을주민을 '원' 모양으로 둘러싼 후 분향소 설치 제한.
- 2014. 1. 28. 사건 현장에 추가 조사관 파견, 현장 추가조사 실시
- 같은 날 반대대책위와 밀양경찰서측 분향소 설치장소 이전 관련 협의 진행
- 양측은 20:45경 분향소를 삼문동 소재 주차장(영남루 건너편)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며 반대대책위 및 주민 철수.
- 진정인은 본 진정사건을 구두로 취하함.

다.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

- 양 측은 2014. 1. 28. 오전부터 분향소 설치장소 이전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20:45경 합의가 이루어짐.
- 반대대책위는 밀양시 삼문동(영남루 건너편) 소재 밀양교 밑으로 분향소를 이전 및 설치할 것에 합의함.
- 경찰측은 분향소 이전에 적극 협조하며, 컨테이너 박스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함.

<붙임 3>

사건 당시 해당 경찰서와 한진중공업 협의사항

□ 한진중공업 경영진

한진중공업 경영진 측이 실질적인 농성현장을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진정인 김진숙의 긴급구제진정과 관련하여 농성 기간 중, 인도적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농성장 관리를 할 것 약속하였음

첫째, 진정인 김진숙에 대하여 생활필수품인 식음료, 의료(속옷, 여성용품, 체온유지를 위한 소정의 이불 등), 의약품(1회 1회분 내외)의 반입을 허용하도록 함

둘째, 안전조치를 위하여 최소한의 외부소통을 위한 핸드폰(인터넷 기능이 없는 것), 배터리, 렌턴용 전지를 제공하기로 함

셋째, 진정인 김진숙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생필품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상담부장[000, 진정인 김진숙이 지목한 사람임]의 출입을 허용하도록 함

□ 00경찰서

이 사건, 농성 기간 중,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비원칙을 수립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약속함

첫째, 진정인 김진숙 및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를 함에 있어 회사 측 용역들이 임의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함

둘째, 진정인 김진숙 및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진압 등 법 집행 시 투신 및 자해에 대한 최대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함.